

교원 수급 정책 개선안 마련 뜻 모아

전북교육청, 3월 27일까지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대상 서명운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합리적인 교원 수급 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뜻을 모은다.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 수급 정책 개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원 정원 상정에 있어서 학생수를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 수와 지역 여건, 학교 기능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북은 농산어촌과 인구 감소 지역 비중이 높아 소규모학교, 순회수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다교과 지도 기초학력 지원,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AI 디지털교육 등 새로운 정책 수요 증가로 교원 1인당 담당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수업의 질 저하와 학생 맞춤형 교육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원 수급 정책이 단순한 행정·재정 문제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 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서명운동은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QR코드 스캔 또는 전용 링크 접속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월 27일까지는 교직원과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 3~27일까지는 각급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소속 기관 누리집 및 SNS, 가정통신문 및 학교 알림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획이다.

또한 서명운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협력해 안정적 교원 수급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원 수급 정책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



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서명운동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립군산대, AI·SW

로봇암·모빌리티 과정 운영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장민석)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총 24시간 과정으로 AI·SW 로봇암·모빌리티 과정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Physical AI가 차세대 로봇·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된 실무 중심 과정으로, AI·SW 분야 전공 재학생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국립군산대 디지털정보관 AI 컴퓨팅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론 조립, 학습 추론, 프로젝트, 시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커리큘럼을 통해 로봇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융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 1일차에는 Physical AI 기반 로봇 이론 교육과 Soam-101 로봇 로밍을 통해 로봇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2일차에는 로봇 VLA(Vision-Language-Action) 교육과 로봇 학습·추론 실습을 진행했고, 팀별 프로젝트 설계를 통해 실제 산업 적용을 고려한 문제해결 과제를 도출했다.

3일차에는 프로젝트 작업 및 로봇 학습 적용을 중심으로 팀별 협업 프로젝트를 심화했으며, 4일차에는 IR5 협동로봇 시연 및 작동 실습과 함께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민호 기자



우석대, 광림과 초광역

평생교육 협력 프로그램 추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대한민국 특장차 산업 선도기업인 (주)광림(대표이사 황태영)과 평생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 (주)광림에서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석대학교가 그간 전북 지역 중심으로 운영해 온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평생교육 모델을 초광역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 첫 사례다.

특히 (주)광림과의 이번 협력은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직자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 및 재교육 과정 운영 △생산현장 적용 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북대학교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입전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교육청 장학사와 고교 교사 등 4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출범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2028학년도 대입 변화에 적극 대응

고교-교육청 대입전형 자문단 출범... 신뢰받는 전형 마련

내달 10일 전북지역 고교 진로 진학부장 대상 간담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입전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교육청 장학사와 고교 교사 등 4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대는 2028학년도부터 대입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형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교-교육청-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출범은 대입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대응

과 글로컬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 정보 교류를 통해 고교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15일 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첫 협의회를 열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2028학년도 전북대 입시 분석, 2027학년도 대입전형계획, 2028학년도 대입전형 방향 등을 설명했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문의 답을 통해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에서는 전북대 입학전형에 대

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며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자문위원들은 "전북대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사전 질문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전북대학교 입학전형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문단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10일 전북지역 고등학교 진로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전북 고교 진로·진학부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캠퍼스 주요 구간 도로명 부여, 공간 상징성 강화

전북대, '이세종로' 등 캠퍼스 도로명 체계 정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캠퍼스 주요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해 건물의 위치 정보 제공과 캠퍼스 공간의 상징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도로명 체계 정비를 통해 구성원과 방문객의 길 찾기 편의를 높이고, 도로 구별별 의미를 부여해 캠퍼스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대는 우선 구성원들에게 익숙하고 인지도가 높은 기존 도로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문에서 중앙광장으로 이어지는 '건지대로'와 일림의거리를 관통하는 '자유로'는 현행 명칭을 유지해 캠퍼스 정체성과 상징성을 보존했다.

또한 대학 교시인 '자유·정의·창조'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인접 도로를 정의로, 창조관 1, 2관 신학 융합플라자, 인문사회관 등의 인접 도로를 창조로로 명명했다. 주변 단과대학 특성을 반영해 공학계열 인접 구간을 '공학로'로, 농생명 분야와 연계된 도로를 '농생명로' 등 학문적 상징

전북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전북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분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결산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업무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결산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 전달 △K-에듀파인 결산시스템 활용 교육 △결산서 작성 요령 안내 등 결산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업무담당자 합동집담 등을 통해 오는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5월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9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승인 심사로 완료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연구의 성과, 산업·미래로 확장

전북대, 20~22일 '2025 JBNU 리서치 페어워크'

피지컬AI·방위산업 분야 대규모 연구 교류의 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대학의 첨단 분야 연구 성과를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장하는 대규모 연구 교류의 장을 연다. 20일 부터 22일까지 전북대 진수당 일원에서 '2025 JBNU 리서치 페어워크(2025 JBNU RFW)'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연구의 성과, 산업과 미래로 확장하다'를 슬로건 아래 전북대의 우수 연구역량과 첨단 분야 성과를 한데 모아 산학연 협력과 지역 혁신의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졌다.

특히 피지컬AI와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컨퍼런스와 BK21 교육연구단 학술 행사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정책적 필요성 제시와 전북대가 보유한 우수 연구의 공유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첫날인 20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피지컬AI·방위산업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현대모템 등 산학연의 주요 전문가들이 나서 신기술 신속확산 전략과 방위산업과 관련해 국방기술 보호 전략을 집중 조망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북대가 추진 중인 피지컬AI와 관련한 제조 혁신 전략과 시스템 구현, 피지컬AI의 미래와 AX 혁신 사례 등을 조망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LG전자, ETRI AI로봇연구본부,

PwC컨설팅, 와이즈넷 등 전문가가 나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술 트렌드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잇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연구가 실제 산업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21일과 22일은 BK21 교육연구단 학술행사를 통해 8개 학과가 참여하는 연구단별 최근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연구에 협력하는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 자리 등도 이어진다.

특히 학생들을 위해 내 정주 유학생 선배 연구자 및 대기업 연구원 등의 특강과 토크콘서트, 그리고 전북지역 유학생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슬기로운 대학생활 방법 등 지역에서의 학업과 진로 정주 경험이 공유된다.

이 시기에는 연구자들이 연구 과정과 도전 진로까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지역 연구 생태계의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행사는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연구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대학의 성과가 산업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확장하는 자리"라며 "전북대가 주도하는 피지컬AI와 방위산업을 비롯한 첨단 분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의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올 학생지원체계 고도화

전북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열고 돌봄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분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위원과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교육비 지원, 돌봄·돌봄운영, 취약계층 및 위기학생 지원,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학생 건강·안전 분야 등 2026학년도 교육복지 전반의 추진 성과 점검과 2026년도 교육복지 세부 사업계획 및 향후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다양한 영역의 교육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편성된 예산의 99.8%를 집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어 2026년도 교육복지 세부 사업 계획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

건으로는 △전북에듀케어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의 재정 지속성 확보 △초등 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 전면 확대 △방학 중 돌봄 간식비 무상 지원 신규 도입 △취약계층 및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지원 내실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생맞춤형지원 체계 정비 등이 다뤄졌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심리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토대"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생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방공무원 심리·정서적 안정 돕는다

전북교육청, 2026년도 상담 지원제도 상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상담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업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 개인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의 정서적 고충을 해소하고, 즐겁게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이 목적이다.

상담은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 갈등, 부부관계·자녀 양육 등 가족문제 등 모든 내용이 가능하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협약 기관(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

나 기관에서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상담자원 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지원한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등 47개소,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등 32개소, 알코올 중독 예방 등 전문외부기관 4개소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상담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책자를 만들어 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지원제도 내용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해 도움이 필요할 자

주요 기관에 안내해 도움이 필요할 자

주요 기관에 안내해 도움이 필요할 자